제1장 국민이해 증진 활동

제 1 절 사회환경의 변화

1. 국제환경의 변화

1973년의 제 1차 석유파동 당시 전 세계에서 가동중인 원전은 147기로, 세계 에너지 소비의 0.8% 정도만을 원자력발전이 담당하였다. 그 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각국은 에너지의 안정 공급을 위해 탈 석유정책의 일환으로 원전개발을 활발히 추진해오던중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원전축소정책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원전건설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프랑스와 일본, 한국 같은 자원빈국인 나라와 일부 개도국들은 원전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2001년 말 현재 전세계 31개국에서 438여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고 세계 총 발전량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동안 원전건설을 억제해온 선진국들은 부존자원이 풍부하거나 전력수요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원전이 아니더라도 전력수요를 충분히 해결하고 있는 나라들이었다.

최근 세계 에너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원자력에너지 소비량의 증가가 2.7%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고 한다. 미국 에너지성의 에너지정보에 따르면 향후 원전발전량 증가의 대부분은 2020년까지 매년 4.9%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는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증가는 중국, 한국, 인도 순으로 보고 있다. 미국도 에너지정책을 원전확대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고 일본, 프랑스는 물론이고 영국도 원전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등 유럽에서도 원전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

기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원전건설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렇게 볼 때 원전은 21세기에도 주력에너지로서 원전의 르네상스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전은 경제성, 안전성, 신뢰성에 있어 유리하며 특히 최근 기후 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구체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는 추세다. 지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2008년부터 2012년 기간 중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이후 4년여 동안 논란만 거듭하다가 지난해 10월 제7차 당사국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이행안이 승인됨으로써 협약발효의 길을 열었다. 발효를 위한 각국의 비준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은 2018년부터 감축규제를 받게 되며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란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선진국들의 의무부담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로 에너지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원자력발전 개발은 화석연료 이용의 한계와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 국내환경의 변화

우리나라는 1978년에 최초 원전 도입 이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탈석유 전원 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원전 중심 정책은 최근 기후변화협약의 등장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장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의무화될 것에 대비하여 원자력발전 비중을 설비용량 기준으로 2015년까지 34%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자력발전이 온실가스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인 점을 감안하여 원전의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전력은 사용편리성으로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에너지수요는 연평균 7.5% 증가한 반면, 전력수요는 9.8%증가해왔다. 1998년 외환위기로 최초로 전력수요가 마이너스(-3.6%)성장이었으나 이후 11.3%의 연간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력수요는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2015년에는 지금보다 1.5배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원전 위주의 전원개발 정책은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상기와 같이 급증하는 전력수요로 원전확대정책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국내환경은 만만치 않다. 특히 최근엔 지자체실시와 환경문제로 인해 지역이기주의(NIMBY)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분위기에다가 기존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가세화 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나 안정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막연한 불안감을 앞세워 우려하는 편이다. 이중적인 국민정서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래서 원전에 대한 국민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원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합의위에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협조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사실 지금까지의 원전 사업은 주민 의사보다는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우선시하여 추진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는 지역 주민들의 심한 반대를 촉발하여 사업 자체가 좌절되거나 성공

하더라도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끊임없이 민원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공익을 앞세운 종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익과 주민들의 의사를 같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전사업의 시급한 현안 문제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부지확보인 바 가장 공개적인 방안인 유치공모를 시도해보았으나 지자체의 신청 지역이 한 군데도 없었다. 현재 사업자주도방식으로 부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망이 불투명하다. 정부도 원전정책에 대해 투명성을 견지하고 방폐물 등의 현안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원전은 주력발전원으로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합의와 지역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앞으로 원전사업은 부지확보는 물론 전과정을 투명한 공개주의 원칙으로 정책을 전환할 때 국민신뢰는 점점 쌓아지게 되며 이로써 원전에 대한 국민합의 기반이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제 2 절 국민이해 증진 활동

1. 원자력발전 PA활동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은 1978년 고리 1호기가 최초로 상업운전에 들어간 이후 지난 24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현재 17기(1,471만 kW)의 원전설비를 보유함으로써 설비용량기준으로 세계 6위의 원전보유국이 되었다. 그리고 북한 원전을 포함하여 총 5기의 한국표준형 원전이 건설되고 있으며 장기전원개발계획상 2015년까지 신규원전 8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같

이 원자력발전은 주력 발전원으로 전력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원전에 대한 국민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원전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아직도 대단히 미흡하고 국내외 여건과 국민이해 부족으로 원전사업추진 환경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에서 원전에 대한 대국민홍보는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각각 그 역할을 달리하고 있다. 한전내 원자력홍보조직이 1989년부터 원자력 전반에 걸친 홍보를 수행해 오다가 1992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이원화되었다.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주)은 사업자 입장에서 원전운영의 투명한 공개와 사업의 당위성 홍보를 위주로 국민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고, 원자력문화재단은 민간전문기관으로서 원전에 대한 국민합의 기반구축을 위해 대국민홍보를 주관하고 있다.

지난해 원전분야 주요 뉴스를 한수원(주) 입장에서 보면 우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가 결국 무산되었다. 2001년 6월말까지 유치공모기간을 연장했으나 신청지역이 없어 사업자주도 방식으로 전환하여 부지선정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원전사업의 최대현안으로 오랜 숙원사업이나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방사성폐기물(방폐물)에 대한 대국민홍보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당위성에 대해 국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잘 몰라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중대한 국가사업이라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관련 이슈사항으로는 영광 5호기가 지난 5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간 이후 영광군과의 건축허가문제로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다. 국내 20번째 원전인 울진 6호기의 원자로설치가 5호기와 1년 시차를 두고 지난 7월에 되어 5호기와 함께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지난해 9월 초에 영광 4호기가 세계 원전 430여기 중 이용률 1위를 달성했다고 영국의 세계적인 원자력전문지인 NEI에서 밝혔다. 세계 이용률 1위 달성은 국내 원전 사상 통산 17번째로서 안전성이 더욱 보강된 한국표준형원전에 대한 운영기술력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외에 세계원전사업자 총회 서울개최, 한수원(주) 원전기술의 루마니아 진출, 발전회사 파업관련 연대파업 투표중단, 온배수이용 어류 방류행사, 울진 지역스포츠센터 준공, 북한원전사업 등 많은 뉴스거리가 있었다. 특히 한수원(주)은 원전사업자로 출범한 지 1년 조금 지났으나 국내외 로부터 우수한 신용평가를 받았다. 작년말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터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한 이후 최근엔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S&P로부터 "A⁻ "를 받았다. 이로써 기업이미지 제고는 물론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의 성공적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지난 7월에 월성 2호기에서 미량의 중수누설사건으로 일부 근무자들의 방사선피폭이 있었으나 언론에서 사실대로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주던 과거의 과장보도형태가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에너지현실에서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너지로서 국민합의(PA)가 우선되어야 하나 국민대다수는 원전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전의 필요성, 환경친화성, 경제성과 경제발전의 기여도 등에서 일관되게 긍정적인 인식이나 반면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안전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원전PA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신뢰증진을 위해서는 안전운영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원전과 안전의 실상을 국민들이 수용하도록 국민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혹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운영의 투명한 공개문제는 많이 개선되어 왔고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원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수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은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가끔 발생하는 사소한 원전고장에 대해 언론의 왜곡, 과장보도로 인하여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원전신뢰도는 떨어진다. 2~3년 주기로 발생하는 월성 중수누설사건이나 방사선피폭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원전의 실상을 외면한 채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건수 위주의 안전지적사항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가끔 있다. 언론은 앞으로 원전이 핵심적인 국가에너지라는 측면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견지하고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성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원전사업은 안전성 보장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이제 국민들도 원전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자인 한수원(주)과 정부를 믿고 원전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어야 한다. 언론은 국가사업인 원전을 이해하고 정론을 펼쳐 원전PA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한편 국민홍보를 직접 맡고 있는 원자력문화재단과 사업자 측에서도 원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현재 원전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와 자원문제, 대체에너지개발의 한계로 인하여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 이점을 감안한다면 원전홍보를 다각적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홍보효과의 극대화차원에서 참신한 홍보

전략하에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원전PA를 기필코 이루어야 할 것이다.

2. 기관별 활동

가. 한국수력원자력(주)

지난해에 한수원(주)의 원자력 PA활동은 원전사업의 현안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확보와 원전운영의 투명한 공개,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방폐물 홍보는 한수원(주)의 환경기술원이 주관하여 유치관심지역에 치중, 지역언론을 통하여 처분시설의 당위성과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다각도로 실시하였다. 반면에 지난해에는 원전사고 없이 우수한 원전이용률을 달성 한 바 언론의 비판적보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방폐물을 비롯한 원전관련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1) 원전 공개정책

원전은 안전성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운영을 하고 있지만 원전 사고·고장에 대해 그 실상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불안 해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원전은 핵과 방사선이라는 공포 때문에 근원적으로 절대안전을 보장하기가 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원전공개정책은 정부(과학기술부)에서 원전 사고·고장정보 공개지침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와 정부는 원전에서 사고·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에 그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공개는 그 대상에 따라 신속한 정보공개가 요구되는 것은 언론공개와 인터넷공개를 병행하고, 그 외의 공개대상 정보는 인터넷에만 공개하고 있다. 언론공개는 사고·고장정보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언론에 공개한 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인터넷공개는 해당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각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원전고장관련 인터넷 주소

기 관 명	홈페이지	게 재 코 너
과학기술부	www.most.go.kr	정보자료실→원자력소식→원자력사고 · 고장 정보내역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www.kins.re.kr	원전사고/고장정보
한수원(주)	www.khnp.co.kr	원전운영현황/원전사건정보

지난해에 발생한 고장에 의한 발전정지 8건은 즉시 신속하게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됨으로써 원전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원전운영공개는 공개지침에 따라 우선적으로 언론공개를 신속하게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발간물을 통한 공개와 시설공개가 있다. 또한 원전운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운전현황, 방사선관리 등 원전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원전운영정보의 공유화를 기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주)인터넷 홈페이지(www.khnp.co.kr)에는 원전운영정보가 다양하게 공개되고 있다.

발간물을 통한 공개로는 운영공개지인 「이달의 원자력발전」을 매달 3.5만부씩 발간하여 각계각층의 일반국민들에게 배부하고 있고 원전본부별로 소식지를 발간하여 매달 지역주민과 관련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또한 한수원(주)이 정부와 공동으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원자력발전 백서」를 5천부 발간하여 국내 원전정책, 운영현황, 방사성폐기물관리, 국내외동향 등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원전에 대한 국민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시설공개는 원전의 실상을 직접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공개 수단이다. 따라서 원전별로 홍보전시관이 있어 연중 방문객들에게 개방하고 있고 원전시설도 직접 볼 수 있다. 특히 발전소 내부시

설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See-through)을 갖춤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수원(주)의 본사 주관하에 주로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원전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원전의 실상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이다. 지난해에도 기자단을 비롯하여 정당 및 각계 인사 등 많은 지도층 인사들이 시찰을 한 후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원전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2) 차세대 교육

차세대에게 원자력을 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은 원전사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한수원(주)에서는 미래의 주역으로 차세대인 초·중·고생들에게 원자력이해를 증진시켜 주기 위해 원자력문화재단과 협조하여 차세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학생 및 교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원자력과 친밀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데 여기에는 교원연수, 일일교사참여, 청소년원자력교실, 현장학습, 교원시찰, 대학생워크샵, 청



〈그림 6-1〉 원전시찰 활동

소년원자력캠프, 기타 장학사업으로 장학금 지급과 원자력작문모집 및 원자력공모전, 원전주변 학생사생대회 등이 있고 홍보만화, 원자력이야기와 같은 흥미 있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원전별 홍보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전시물과 시설견학을 통하여 원전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 외 차세대교육 사업으로 정부(산업자원부/교육부)와 원자력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차세대교육협의회」운영을 통해 교과서의 원자력내용을 분석하고 올바른 서술을 위한 자료제공 및 매년 교과서의 내용수정을 해오고 있으며 관계인사들의 원전시찰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전이 21세기에도 주력에너지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차세대의 원전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부터 원자력교육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일반국민 홍보

원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도는 원전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안전성은 우려하고 있는 편이다. 원전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언론, 환경단체 등을 통해서 받은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게 일반국민정서이다.

원전에 대한 국민합의가 근원적으로 어려운 점도 이 안전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인 한수원(주)은 안전제일주의로 안전운영을, 공개주의로 투명운영을 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반국민 홍보도 원전안전의 실상을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대 국민홍보는 직접적인 활동보다 원전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대 국민홍보는 한국원자력 문화재단이 전담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방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한수원(주)에서는 원전운영공개 차원에서 주로 언론홍보와 인

쇄홍보물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 원전사고·고장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의혹, 원전주변 환경문제, 온배수문제 등 원전관련 이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원전사고나 관련 큰 뉴스거리는 없었다. 다만 원전사업자로 새롭게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을 널리 알리고 또 원전 홍보성 이슈사항 발생시마다 언론 공개를 통해 원전사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유치를 위해 유치가능지역들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홍보노력을 계속 해왔다. 그 외 원전뉴스를 보면 영광 5호기 건축허가 문제, 북한원전문제, 세계원전 사업자협회(WANO) 총회 개최, 국내 원전기술 해외진출 본격화, 온배수 양식어류 방류, 원전주변 환경영향조사 결과 발표, 영광 4호기 이용률 세계 1위, 한수원(주)의 신용등급 우수 등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의 취재지원, 기고 및 독자투고 등 을 통하여 중앙 및 지역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외에 주간지, 월간지, 전문지에 특집 및 전문가 기고를 통하여 특수계층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지난해에는 다행히 원전에 큰 사고·고장이 없었기에 언론에서 왜곡 보도되는 사례는 없었다. 다만 지난 7월에 월성 2호기 중수누설사건이 있었으나 해명자료를 배포, 진상을 밝혀줌으로써 단발로 끝나고 과장보도로 확대되는 일은 없었다. 몇년 전 국정감사기간에 큰 사고로 오해 왜곡과장보도된 월성중수사건이나 유사한 사건임을 감안할 때 이제 우리의 언론도 건수위주의 남발성 보도경향에서 많이 벗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인쇄홍보물을 통한 홍보는 원전에 대한 종합홍보지인 「원자력에너지」를 발간하여 일반인, 특히 홍보관 방문객과 학교에 배부하였고 특히 차세대 홍보책자인 「1318세대를 위한 원자력이야기」를

흥미유발 내용과 교사교재로 활용하도록 참신성을 높여 발간함으로써 독자들의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원전 및 지역안내용인 홍보용 지도「ROAD MAP」을 4만부 발간하여 학생 및 방문객에게 배부함으로써 원전지역과 관광여행이 연계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4) 지역주민 홍보

원전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원전과 원전가동으로 인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대부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는 일반국민과는 다르게 접근하는 홍보방식이 필요하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은 주로 여론주도층과 대중매체를 활용하지만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활동은 속성상 지역주민과의 밀착홍보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주요 홍보활동을 원전지역별로 보면, 먼저 고리원전 경



〈그림 6-2〉 해변가요제(월성)

우 신고리 원전입지 지역주민에 대한 집중홍보를 하였는데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지역주민 국내외 원전견학, 홍보자료 배포 등을 했다. 그 외에 장안읍민 위안의 밤, 장안골 15개마을 체육대회, 흑염소사육 및 무상기증, 자매마을 홍보활동, 길천마을 중·장기계획수립, 가뭄피해농가 농업용수지원, 대변멸치축제 및 진하바다축제 지원, 주민초청견학, 사생대회, 백일장, 내고장 탐사캠프, 피서철 특별홍보 등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지역주민과 유대강화에 힘썼다.

월성원전 경우 지역문화행사 및 체육행사와 경로행사 지원, 자매마을 지원, 주민초청 낚시대회, 사생대회, 오지마을 방문,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이웃돕기 등을 하였다. 영광원전 경우 어린이날 행사, 사생대회, 하계특별홍보활동, 홍보물학교지원, 스승의 날 일일교사 참여등을 하였다. 울진원전 경우 지역주민 및 지역단체와의 간담회, 지역문화행사 참가지원, 자매마을 지원, 학교장학금 지급, 교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생대회 등 학교특별활동지원을 하였다, 상기와 같이 각 원전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과 친밀감을 도모하면서 공존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역문화제와 지역행사지원, 전시관과 관련시설을 무료결혼식장 또는 행사장이나 자연학습장, 회의장으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광과 월성원전에서는 온배수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매년 5월말에 양식어류 방류사업을 통하여 온배수의 청정성과 유용성을 알리고 있고 특히 하계 피서철에는 영광, 고리, 월성, 울진 해변가요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 있다.

이와같이 원전은 지역사회와의 공감대형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지역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공존의식을 높여나갈 것이다.

(5) 앞으로의 원자력홍보

자원빈국인 국내 여건에서 에너지확보와 자립문제는 국가정책상 최우선 과제다. 현재 국내 에너지 환경은 에너지수요의 급증,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 대체에너지의 개발한계, 이산화탄소 배출 급증, 에너지안보 위협요인 등으로 어려운 환경이다. 여기에다 대표적 에너지인 전력은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도 다행히 원자력발전이 있어 총 발전량의 40%이상을 차지해줌으로써 주력 발전원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경제발전에서 원전의 기여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원전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안전성은 못 믿어서 불안해하고 자기지역에 원전이나 관련시설유치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중적인 국민정서 때문에 국민합의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원전이 정말 불안한건 아닌데도 왜 이런 현실이 되었는지 냉정하게 진단하여 대국민홍보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배경은 원전의 실상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쉽게 접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부정적 이미지로서의 선입관을 먼저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서 원전은 뭔가 불안하다는 인식을 막연하게 갖는다. 원전 지역은 공존인식보다는 막연한 피해 의식 속에 피해보상과 지역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지만 원전에 대한 국민홍보는 지속해야하고 필히 국민합의에 도달 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홍보방향을 설정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첫째는 원전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인 바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 아래 그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원자력현안인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확보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정부나 지도층에서 문제해결에 먼저 앞장서야 하고 지역이

나 시민단체들은 이기적 사고를 탈피하여 진정으로 국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둘째는 국민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신문, 방송)은 국가사업인 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국익차원에서 원전의 실상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사소한 사건인데 반핵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과장보도하거나 한건주의의 보도형태로 인해 원전안전이 치명상을 입는 일이 과거에는 비일비재 하였다. 앞으로 언론은 확실한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국가사업을 위해 정론을 펴주어야 한다.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해줄 때 국민홍보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대국민홍보에서 있어서 원전의 안전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 안전하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원전사업자는 안전운영과 운영의 투명공개원칙 아래 원전의 실상공개주의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내야 한다. 사소한 고장이다 해서 은폐해서는 안된다. 안전하다는 것을 투명하게 보여줄 때만이 국민들은 불안감을 떨치고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난다.

넷째는 원전지역문제다. 원전에 대한 국민이해 기반은 우선 원전지역에서부터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역의 반대가 심하고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지원만 해도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는지 재고해보아야 한다. 지역주민홍보와 지역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불투명하다. 주민들이 국익차원에서 원전사업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민원이나 피해 보상 문제도 그 실상을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전이나 주민 모두 국익을 우선으로 하되 객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전과 지역주민간에 신뢰가 쌓이고 지역동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여건에서 다른 에너지해결책은 없다. 대체에너지인데 아직은 요원한 문제이다. 앞으로도 원전은 대체에너지의 실용화까지는 에너지자립과 환경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발전이 선택이 아닌 필수에너지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전에 대한 국민합의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원전사업이 국민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원전사업자의 철저한 안전의식 및 운영의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기반 위에 효과적인 국민홍보와 지역유대증진을 통하여 국민합의 기반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

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신규원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 확보를 위한 입지사업의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원전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각종 문화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자기 고장에 대한 긍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으로 인한 성과를 홍보하였다.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문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시민으로부터 여론선도층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학계와 공동으로 우리나라 원자력사업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합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기적인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고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홍보수단을 확대해가고 있다.

(1) 국민이해사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시행하였다. 특히 TV-CF의 경우 상반기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일본 아오모리견문록'을 방영하고, 하반기에는 원자력을 우리생활과 밀착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복에너지-원자력'편을 제작 방영하였다. 신문에서도 이와 같은 이미지를 광고를 통해 게재하고, 원자력의 일반현황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필요성 등을 심층취재하여 게재하도록 하였다.

국내외 원자력시설에 대한 시찰사업은 중앙언론사 논설·해설위원을 비롯한 주요 여론주도층과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정보통신을 활용한 홍보는 보다 빠르고 깊이 있게 원자력을 알고 싶어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영상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인터넷에서의 이용자 참여기회도 확대하였다.

(2) 차세대교육사업

차세대의 올바른 이해와 과학적인 사고는 원자력문화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래 우리 사회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에 대한 원자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차세대를 맡고 있는 교사들이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교원연수원 과정에 원자력교육을 개설하고 이론 교육후에는 원자력시설 시찰을 실시하였다. 교사들의 교과연구단체인 원자력교육연구회와 공동으로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지난 7월에는 전남원자력교육연구회가 설립되어 전국규



〈그림 6-3〉 초·중·고교생 사생대회

모의 연구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원자력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형성하고 원자력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학사업과 육영사업을 전개하였다. 전국 중고교생 원자력작문모집, 논문 및 포스터공모 등 육영사업은 학생 스스로 탐구하며 원자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름방학 기간중에 실시한 원자력캠프는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서를 분석하고 교사용 지도서 등 각종 간행물과 시청각 자료를 제작 보급하여 학교교육에서 원자력이 보다 폭넓고 정확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지역문화진흥사업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주민들의 원자력 이해증진과 더불어 문화적인 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 고유의 향토문화제 및

지역주민 교류행사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유대강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여름에 행해지는 해변가요제는 원전인근의 해수욕장을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교육과 문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원자력문예대전, 내고장 탐사캠프, 원자력캠프를 비롯하여 전문극단의 무료 순회공연을 주선하여 문화적인 욕구에 부응하였다.

원자력문화진흥회는 원자력을 통한 지역발전과 원자력문화의 이해 확산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을 인근 원자력발전소에 초청하여 원전운영실태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주민초청홍보사업이 이루어졌다.

(4) 입지지역홍보사업

원전 시설의 입지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확보가 원자력계의 시급한 현안인 만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홍보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설입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성공적인 입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사업절차와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이해증진이 필요한 만큼 각종 간행물 배포와 지역언론를 통한 켐페인을 시행하고, 시설입지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자력시설 시찰을 통해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였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설을 유치한 모범사례로서 일본 아오모리현의 자치단체장을 초청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지역사회 발전사례를 소개, 시설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를 환기시켰다.

(5) 전시홍보사업

전시홍보사업은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원자력의 전반적인 사항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중부권의 명소로 자리잡은

대전 엑스포공원 전기에너지관은 유휴공간이던 별관을 개보수하여 원자력 상설홍보관으로 운영하였다. 국립서울과학관과 고창 삼인종합학습원에 운영하던 원자력관은 노후된 전시물을 교체하여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자력발전소 계통모형 등으로 새로이 제작된 이동전시물은 2001에너지전시회, 2001서울국제전기종합기기전을 비롯한 대중적인 이벤트 행사에 활용되어 대상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선보임으로써 관람객의 흥미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축소 제작된 휴대용 모형물은 원자력 일일교사 사업 등 원자력강의에도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활용되었다.

한편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국립과학관과 서울과학관을 찾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자력교실을 운영하였는데, 각 과학관에서 개최하는 과학탐구교실과 연계하여 원자력퀴즈, 홍보영화 상영 등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6) 국제협력사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인류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제간의 긴밀한 협조와 이해를 필요로 한다. 외국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 또는 언론인, 학생 등의 상호방문은 이러한 이해와 협조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현재 입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원자력선진국의 원전 운영사례를 정책결정층과 시설입지 관련인사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찰사업과 국제적인 연구정책 정보수집 및 최신 홍보사례 교류를 위해 국제협력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제3회 한·불원자력홍보세미나에서는 프랑스 원자력청과 함께 양국의 홍보전문가들이 모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방안을 모색하였고, 2001미국원자력학회 하계대회와 일본원산연차대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원자력홍보현황과 조사자료에 근거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원자력동향파악 및 원자력 관련 각종 정보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세계원자력협회(WNA)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일본원자력문화진흥재단과는 원전시찰단의 교류를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였다.

(7) 홍보연구사업

과학적인 국민이해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국민의식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해 형성되어 있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동아대학교 산업의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원자력발전소 근무환경 평가연구는 원자력문화를 위한 산업심리측면에서의 새로운 영역을 도입하고 자체적인 연구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원자력홍보세미나에서는 연간 원자력홍보 성과를 종합하고 원자력계의 우수 홍보사례를 발굴하고 경험을 교환하였다.

제3절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식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2001년말 한국갤럽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전화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성인남녀 1,65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4%이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사대상자의 85.4%가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변함없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보다는 남

자(87.7%), 18-29세(87.6%), 자영업(89.4%)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조사에서도 8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과 일치하여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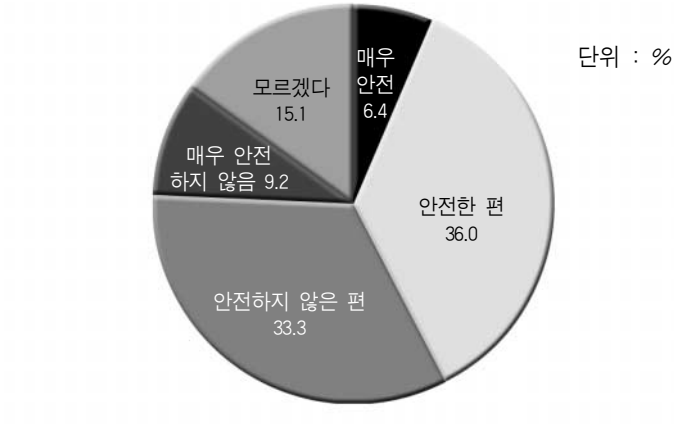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데 52.4%가 찬성하고 있다. 계층별로는 역시 남자(54.1%), 18-29세(57.9%), 학생(61.3%) 가운데 찬성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원전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약 30%를 보였다.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원전이 건설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29.8%에 지나지 않고 62.4%가 반대하고 있어 입지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찬성율은 남자(37.1%), 자영업(37.9%), 학생층(37.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원자력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취업에 도움이 될 경우 자신의 거주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찬성하겠다는 의견은 이보다 높은 39.1%로 나타나 시설입지에 따른 지원책이 가시화될 경우 지역에 대한 수용도도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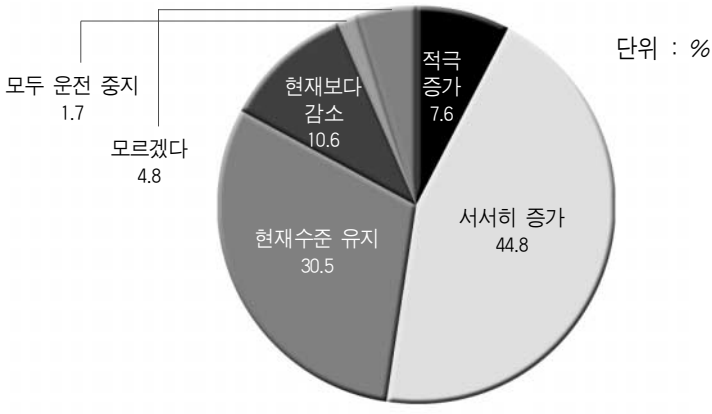
국내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42.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42.5%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의견은 크게 양분되었으나 과거에 비해 안전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원자력에 대한 수용태도를 결정짓는 것은 원자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되는데 구체적으로 원자력발전이 다른 발전방식에 비해 지구환경에 도움이 된다든가(52.0%), 질병의 진단과 치료, 농산물 품종개량에 이용된다(59.2%)는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주변에 살면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73.1%)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체르노빌과 같은 원전 사고가 일

어날 수 있다(75.6%)고 생각하는 현상들은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의 실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과학적 실제와 인식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해사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그림 6-4〉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그림 6-5〉 원전 추가건설에 대한 의견

제4절 해외의 여론동향

1. 미 국

미국 원자력에너지협회(NEI)가 비스콘티와 브러스킨사에 의뢰하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의 결과 앞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데 대한 미국민의 찬성도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1월에는 응답자의 51%가, 3월에는 66%, 7월에는 63%, 10월에는 59%가 찬성하여 1999년 10월에 조사했을 때의 찬성도 42%에 비하면 최대 24%가 증가하였다.

신규 원전건설에 대한 찬성도는 미국 전역에 걸쳐 늘어났으나 특히 최근 들어 전력난을 경험한 미국 서부지역에서는 1999년 10월과 2001년 7월 사이에 30%가 증가하였고 중서부지역에서도 같은 기간에 22%가 늘어나 다른 지역보다도 증가현상이 뚜렷하였다.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전 가동기간을 연장해도 좋다는 의견도 1월에는 81%, 3월에는 87%, 7월에는 85%, 10월에는 84%로 99년 10월의 79%보다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장차 필요하다면 원전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3월에는 73%, 10월에는 84%가 찬성하여 99년 10월의 60%보다 각각 13%와 24%가 늘어났다.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정전사태에 비추어볼 때 향후 5년내에 필요하다면 전력회사들이 신규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 3월 조사시 78%가 찬성하였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와 같은 긍정적인 여론은 대다수 국민이 미래에도 원자력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일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차 미국의 전력 공급에 있

어 원자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은 1월에는 68%, 3월에는 70%, 10월에는 74%로 나타났다.

10월 조사시 응답자의 65%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사용을 지지하고 있고 66%가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1980년대 초부터 같은 설문으로 조사한 이래 과거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응답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기존의 원전 부지에 추가 건설을 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은 7월에 64%, 10월에는 66%였으며, 원전을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응답자들은 각각 71%와 69%가 수용 의사를 나타내었다.

2. 일 본

에너지·정보공학연구회가 2001년 1월에 발표한 "에너지·원자력에 관한 여론조사와 국제적 비교"는 전년도 11월에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과거에 비해 에너지 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관심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장래의 전력 공급방식이나 발전소 건설의 필요성 등에 있어 원자력에 대한 지지도가 과거 최저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에너지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전국에서 80%, 원전지역에서 84%로 나타나 과거 8차례의 조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원자력을 장래의 유용한 에너지원이라고 지적한 응답자는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30%였고 원전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42%였으나, 전번보다는 각각 8%씩이 낮아져 역시 과거 조사 가운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장래의 주요 전원으로서의 역할면에서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응답자는 전국에서 29%, 원전지

역에서 80%로 나타났다. "원자력이 향후 10년간의 주요 전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이전까지는 전국에서 50% 수준이었으나 이번에는 40%로, 또 원전지역에서는 지금까지의 60% 정도에서 50%로 낮아졌다.

또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전국에서 25%, 원전지역에서 29%로 나타나 각각 7%와 9%씩이 낮아졌다. 또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절반 이하인 47%로 나타났고 원전지역에서도 60%로 나타나 이 역시 모두 과거 최저를 기록했다.

현재 원자력의 주요 과제에 관한 설문에서는 핵연료주기 정책에 대해 찬성자는 전국에서 42%, 원전지역에서 39%로 나타났다. 플루토늄의 경수로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찬성율이 전번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반대율이 전국에서 28%, 원전지역에서 37%로 나타났고, 특히 원전지역에서 반대율이 12% 높아졌다. 이 밖에 고준위폐기물 지층처분에 관한 응답에서도 찬성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등 원자력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엄격해진 경향을 보였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도 2000년 11-12월에 전국의 도시와 원전 소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13개 도시와 원전 입지지역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된 6,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 중 4,367명(소비지역 3,620명, 입지지역 747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에너지청이 실시한 에너지 여론조사로서 가장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 결과 90% 가까운 사람들이 일본의 에너지 공급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시주민 가운데 40% 정도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원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등 원자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장래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도시지역에

서는 원자력이 38%, 원전지역에서는 51%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모두 태양광발전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현재 전기, 가스, 석유 등 일본의 에너지 공급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도시지역에서 84%(약간 불안하다 43% 포함), 원전지역에서 88%(약간 불안하다 50% 포함)로 나타났다.

또 향후의 에너지정책으로 중요한 것으로서 '에너지 절감 추진'(도시지역 64%, 원전지역 81%)이 가장 많았고, '신에너지 도입 촉진'(도시지역 38%, 원전지역 47%)이 그 다음을 이었으며, '원자력발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도시지역에서 18%, 원전지역에서 15%로 일반적으로 에너지절감과 신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래의 전원으로 어느 것이 주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원자력이 태양광발전(도시지역 64%, 원전지역 89%) 다음으로 높아 현실적인 에너지로는 원자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원전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원전지역에서 78%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도시지역에서는 21%에 그쳤고,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는 원전지역에서는 9%인데 비해 도시지역에서는 39%에 달해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에너지문제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으로는 'TV・라디오를 통한 CM프로그램'이나 '신문・잡지를 통한 광고・특집기사' 등이 도시지역과 원전지역 모두 70~90% 정도로 높았고, 도시지역에서는 '발전소 견학'(43%)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3. 프랑스

프랑스 원자력청(CEA)의 주관으로 2001년 4월 여론조사기관인 IPSOS에 의뢰하여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약 70%가 프랑스의 원자력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63%는 프랑스가 계속하여 세계 원자력산업을 주도하는 나라의 하나로 남아있도록 힘쓸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중 대다수는 원자력이 프랑스의 에너지자립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조사대상자들이 원자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과학자들에 대해 신뢰를 표명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자의 68%가 프랑스의 원자력사업을 높이 평가
- 76%가 원자력 정보를 제공하는 과학자들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고 있음
- 62%가 원자력분야의 계속적인 연구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함
- 63%가 프랑스가 세계 원자력산업의 주도국으로 계속유지 희망
- 88%가 프랑스의 에너지생산방식 선택에서 가장 중요사항의 하나로 온실가스의 위험성을 들음. 2명중 1명은 온실가스 배출방지를 위한 해결 책의 하나로 원자력을 들음.
- 67%가 원자력이 프랑스의 에너지 공급 자립에 중요
- 59%가 원자력이 고가의 석유·가스에 의한 경제적 영향 감소
- 조사대상자중 34%는 원자력산업으로 인한 위험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원자력 큰 사고위험: 56%, 경미한 위험성 : 38%)

근처에 살기를 싫어하는 기피시설로서 46%가 원자력발전소를

들었으며 나머지는 화학공장(37%), 소각장(9%), 정수장(4%), 무응답(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50년간의 프랑스 원자력의 장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자 중 33%가 원자력이 계속 프랑스의 주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52%는 많은 에너지원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원자력의 이용을 포기할 것을 원하는 응답자는 36%였다. 원자력발전소에서의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76%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4. 독 일

독일원자력산업회의(DAtF)가 알렌스바하 연구소에 의뢰하여 2001년 8월 23일~9월 3일에 2,07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독일국민들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려는 독일의 현 정책이 차기 정부에 의해 번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이 장래의 국가산업을 위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 원전의 가동수명을 제한하기로 정부와 전력회사간에 정치적인 협정이 체결된 후에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22%만이 국가산업에 대한 원자력의 기여도가 앞으로 20년 내에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47%는 차기 정부가 이 협정을 번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26%는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27%는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원자력산업회의측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국민 대다수가 이 협

정이 번복될 수 있고 장래에 다른 연방정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독일국민들은 비록 원전의 단계적 폐쇄가 계획되고 있지만 외국에서도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는 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독일국민의 3분의 2는 필요하다면 원자력발전 이용을 확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자력발전을 반대하고 있는 응답자들 중에도 61%는 독일의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응답자 중 68%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입장과는 관계없이 독일이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장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tF는 "원자력발전의 찬성자나 반대자 모두가 최종 처분에 대한 질문에서, 이는 연방정부의 책임이고 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5. 스웨덴

스웨덴 원자력훈련안전센터(KSU)의 위탁을 받아 2001년 6월 여론조사기관인 테모사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인구 10명중 8명이 기존 원전을 계속 가동할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중 55%는 안전상의 이유가 아닌 한 원자력발전을 계속 이용할 것을 원하고 있었고 24%는 구형 원전을 신형 원전으로 교체할 것을 원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18%만이 안전상의 이유와 상관없이 정부의 원전 폐쇄정책을 지지했다.

이번 조사는 전년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지지율은 증가하였는데, 앞 조사에서 여성의 30%가 정부의 원전폐쇄 정책을 지지했던 것에 비해 23%로 그 지지율이 떨어졌다.

환경보전을 위한 방법으로서 응답자 중 71%가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해 앞으로 온실가스배출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응답했고, 15%는 아직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강을 수력발전을 위해 개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10%만이 모든 원자력발전의 중단을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하였다.

스웨덴 원자력훈련안전센터(KSU)의 위탁을 받아 테모사가 2001년 11월에 일반 국민 1천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웨덴국민들의 생각은 전년도 이후 대체로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웨덴 국민의 약 80%가 원자력발전의 계속적인 이용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응답자의 19%만이 안전상의 이유와 관계없이 원전의 단계적 폐쇄, 특히 바르세보크 2호기의 조기폐쇄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37%는 안전 또는 비용상 문제로 폐쇄될 때까지 스웨덴 원전 11기를 계속 가동할 것을 찬성했고, 28%는 기존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운전수명이 다하면 신규 원전으로 대체할 것을 지지했고, 11%는 필요하다면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등 추가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는 무응답자였다.

또 의회에서 결정한 3가지 환경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을 최우선사항으로 꼽았는데, 대응 방법으로 응답자의 75%가 온실가스 배출증가를 막는 것이 우선 사항이라고 하였고, 12%는 수력발전을 위해 아직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강을 개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3%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원자력의 단계적 폐쇄를 우선 사항으로 꼽은 사람은 남자가 7%, 여자가 13%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같은 방법으로 11월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6%의 응답자가 원자력발전의 지속을 바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안전성이나 경제성에 문제가 없는 한 운전을 계속해야 한다' 는 응답이 37%, '운전을 계속하되 수명이 다한 것은 새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28%, '원자력발전 개발을 추진하되 필요하다면 신규 원전도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11%로 나타났다. 한편 '규제당국은 11기의 원전이 안전하다해도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응답은 37%였다.

스웨덴의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75%가 '이산화탄소 배출억제'를 들었고, 12%는 '수력발전소 건설저지'를 들었으며, 10%만이 '원자력발전소 단계적 폐쇄'라는 반응을 보였다. 의회는 2001년 12월 원래 2001년 7월 1일까지 폐쇄하기로 했던 바르세베크원전 2호기에 대한 조치를 취소하였는데 이 문제는 2002년 9월에 실시될 총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6. 체 코

체코전력공사(CEZ)는 테일러넬슨· 소프레스 팩텀사에 의뢰하여 18세 이상의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2001년 10월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석유와 석탄의 선호도가 가장 낮고 원자력이 선호도가 가장 높은 에너지 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72%가 원전 가동을 지지하고 2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전력공사는 조사 결과 원자력이 천연가스 및 수력과 더불어 체코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에너지원이었고, 석유와 석탄이 가장 선호도가 낮은 에너지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력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정부계획에 대한 부분에서는 응답자의 48%가 단일부문(발전, 송전, 배전 포함)으로서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지지했고 34%가 반대, 18%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다. 응답자중 약 절반이 민간업체에 전력산업을 매각하는 데 동의했고 42%는 반대, 8%는 불확실하다고 응답했다.

7. 헝가리

헝가리 팍스원전의 위탁을 받아 TNS Modus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헝가리 국민들이 팍스원전을 계속 가동할 것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의 상당수가 이 원전에서의 추가 건설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중 73%가 4기의 팍스원전을 계속 가동할 것을 지지하였는데 지지율이 70%를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또한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신규건설을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자가 49%로 1999년에 40%였던 것과 비교해 늘아난 수치였다. 응답자중 약 절반인 47.6%는 원자력발전이 헝가리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을 생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의 향후 20년간 원자력발전계획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16.1%가 신규 원전건설을 지지했고, 29.5%가 팍스원전의 운전수명이 최소한 2025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것은 팍스원전측 자신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9.4%의 응답자는 에너지수입에 의존하는 한이 있더라도 팍스원전을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